

# G-Welfare Weekly Report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신년사로 본 2016년 정부의 복지관련 정책 방향

##### 01 주요 내용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 국정운영의 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무리,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부문 개혁 완수, 창조경제 확립, 일자리 창출, 안보태세 강화 등을 강조
  -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장관들도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의 메르스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보건복지 전 반의 정책 방향을 제시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신종감염병 대처를 위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 중증외상센터와 응급센터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의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보건의료 분야 R&D 확충 및 관련 규제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위기 노인·학대 아동 등에 대한 보호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내실화 의료비 부담 경감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3대 비급여 경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는 노동개혁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시기” 라고 밝히며 세 가지의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을 제시

- ①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의 조속한 마무리, 현장에서 실천을 촉진
- ② 정년 60세 시행,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 활용,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유무 점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화(중장년·장애인 등 취업지원의 원스톱서비스제공)
- ③ 기초고용질서 확립, 산업안전 강화

-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주거급여제도 도입과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를 성과로 언급하며 2016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거급여와 금융지원 추진,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
- 교육부장관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포함된 6대 교육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
-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
  - 경력단절·청년 여성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서비스 강화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백서 발간을 언급

## 2. 「청년발전기본법안」 발의

### 01 주요 내용

- 청년계층의 무한한 능력 개발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년발전기본법」(안)이 발의(김광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 청년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정책관 지정,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수당 지급, 다양한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청년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① 청년정책기본 계획 : 중앙정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② 청년발전위원회 :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별로 청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③ 청년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④ 사회활동 촉진 :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문화, 복지 증진 및 청년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15년 8월 경기도 내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청년들이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 추진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내용 중 청년발전기본법안의 내용과 중첩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연구’, ‘청년정책위원회’ 등은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추진되어야 함
  - 경기복지재단(2015) 「경기도 청년계층 특성분석과 정책 방향」 연구는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각 영역에 대한 추진방안과 내용을 제시
- 경기도에서 추진·예정인 정책 등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가칭)’ 제도 도입
  - 경기도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차별적 요소 등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의 영향력을 사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추진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계층 중심의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기, 중기별로 일자리 증감 및 고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일자리 예측 체계 구축
- 청년계층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인트형 경기도 지역화폐(가칭 희망수당) 제도 도입
  - 청년이 지역사회 및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이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 참여 촉진
  - 공익적 활동의 범주는 공공 및 준공공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가치 창출 등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희망수당(가칭)은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하되, 경기도 내에서만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외부로의 자원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로 구축

입법예고 기간 :  
'15.12.31.~  
'16.01.09.

# 02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신년사로 보는 지방정부 정책이슈

2016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정책 추진의 방향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어, 신년사를 통해 새해의 지방정부의 정책 이슈를 살펴보고자 함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신년사를 보면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맞춤형 복지를 공통적인 정책이슈로 선정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른 전략적 이슈로 재정건전화, 협치(소통)등을 채택
  -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새해 신년사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거점개발 또는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개발, 맞춤형 복지제도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
  - 한편 신년사에는 재정·인구·경제상황 등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맞춤형 정책이슈로서 경제구조 혁신, 재정 건전화, 도시재생, 협력정치 등이 언급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장)별 신년사 키워드〉

	민생일자리	맞춤복지	지역개발	경제혁신	건전재정	협력정치	도시재생	도시안전
경기	●	●	●	●		●		
서울	●	●				●	●	
부산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강원	●		●					
충북	●	●	●					●
충남	●	●	●			●		
세종		●	●				●	●
전북		●	●	●				
전남	●	●	●			●	●	
경북	●		●				●	
경남	●		●		●			
제주			●				●	

- 경기도의 경우 새해 신년사를 통해 경제체질 개선, 타깃형 복지정책 추진, 경기북부 발전, 연정 기반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음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새해 정책 주요과제로 오픈플랫폼 기반의 공유적 시장경제 형성,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타깃형 복지정책 추진, 경기북부 중심의 균형발전 추진, 경기연정 기반 강화를 선정
-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이슈가 복지 확충에서 민생경제 회복으로 전환되고 주요 정책 타깃은 노인·아동층에서 청년층으로 확대되는 경향
  - 지역의 정책적 관심사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구조 혁신을 꼽고 있음. 그동안 지속되던 무상복지 등 복지확대 기조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복지 체감도 상승과 복지재정 효율화로 변화하고 있음
  - 경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충북·전남 등 9개 시·도가 청년층 주거문제 또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두드러지게 확대

# 03 FACT CHECK

## 주거비부담 저소득층만의 문제인가?

- 경기복지재단(2015)\*은 경기도내 소득계층별 월소득대비 월임대료비율(RIR)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고소득층도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표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35% 전후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중소득층은 2006년 20.1%에서 2014년 25.2%로 5.1% 상승, 고소득층은 같은 기간 5.7% 상승하였고, 이는 전세의 월세전환 및 임대료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경기도 소득계층별 RIR 현황〉 (단위 : %)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저소득층 : 소득 1-4분위	35.8	35.9	31.9	41.9	36.1
중소득층 : 소득 5-7분위	20.1	21.7	22.4	27.5	25.2
고소득층 : 소득 8-10분위	18.1	18.8	19.3	27.9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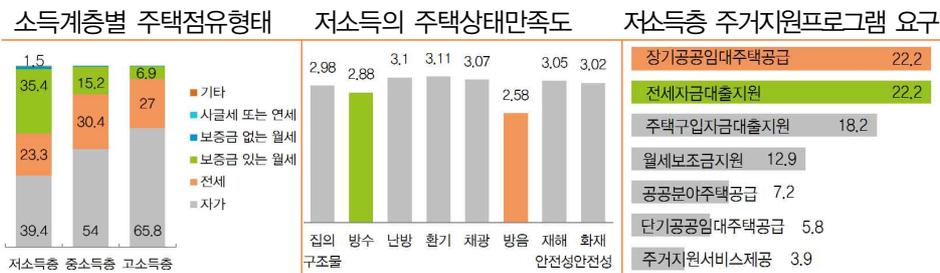
- 임대료 부담이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임대차시장을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 등 주거안정정책을 수립해야 함
  - 또한,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임대료 수준을 서민층이 부담가능한 정도로 낮추는 정책 수정이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는 ‘착한임대인’ 제도 등을 만들어 임대료 인상폭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임대인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단독주택밀집주택 임대인에게 공용주차장 건설 등)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이 요구됨

\*경기복지재단 (2015). 경기도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실태분석 연구.

\*월소득대비 월임대료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

# 04 통계로 보는 복지

## 경기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총5개년 자료(2006년~2014년)

-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39.4%가 자가에 거주하며 저소득층은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월세의 비율이 2배에서 5배 정도 많음
- 저소득층의 주택만족도 중 가장 낮은 부분이 방음상태(2.58점)이며, 그 다음으로 방수상태(2.88점), 집의 구조물(2.98점) 순이며 평균만족도는 2.97점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과 전세자금대출지원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음
- 저소득층 주거비완화를 위한 '경기도형 주택바우처사업' 및 '따복전세마을' 확대가 필요

\*단위: %, 점

# 05 해외동향

## 1. 신년사를 통해 본 2016년 세계정세 키워드

신년사는 새해를 맞이하는 공식적인 인사말로서 국가 정상들의 신년사는 세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 해를 전망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자료 : 연합뉴스  
1.1.일자 보도 등

- 1일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신년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테러·난민·경제 살리기였음
- 작년 한 해 동안 파리 테러와 100만명의 난민이 유입된 유럽 대륙은 주로 테러와 난민이 주된 화두였음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를 언급하며 IS와 전쟁을 통한 테러리즘 격퇴에 초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 테러리즘과 싸우고 있는 자국 군인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을 호소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문제에 대해 독일인이 포용적인 태도를 당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나의 첫 의무는 끔찍한 테러리즘으로부터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것”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도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단호한 의지와 결심으로 국제 테러리즘과 싸우며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다” “국가의 성공은 각 국민의 성취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조국의 이익을 위한 열망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다”
메르켈 독일 총리	“국가는 성공적인 이민으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얻는다.” “현재 우리가 도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 반면, 경기 둔화에 휩싸인 아시아에서는 경제와 복지가 부각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은 유럽 정상에 비해 구체적인 새해 목표를 공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구조개혁과 개혁개방을 강조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전을 화두로,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며 '국내총생산 600조 엔(5천860조 원), '간병을 위한 이직 제로' 등 이른바 '1억 총활약 사회'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또한 시행을 앞둔 개정 안보법을 홍보하고 올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농촌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합심하자” “13억 중국인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도덕적 책무” “2016년은 중국이 전면적 샤오강(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로 진입하는 결정적 단계에 들어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전, 도전, 그리고 도전뿐”이라며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 G7정상회의 개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등을 언급하며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

- 주요국의 정상들의 신년사는 IS의 직접적 테러와 난민 유입으로 유럽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혼란,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중국 경제의 둔화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부활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